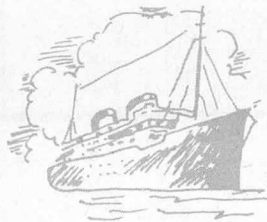


輸出入自由化와 市場 개방 對 備戰 略



한 백 응
(본회 전무이사)

産業政策의 초기단계는 생산의 확대를 위한 지원과 권장 등 소위 생산위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農業도 自給農 단계를 벗어난 완전 商業的 단계에 접어든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農業이며 바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위주의 산업체제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는 생산분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산업의 발전적 변신력을 상실하게 되며, 非農業의 기능인 생산자재의 문제를 비롯한 생산물의 처리·가공·저장·판매 문제 등 유통 문제와 소비분야 등에 상대적 낙후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생산자는 고도산업사회의 經濟發展에서 소외와 희생을 당하게 된다.

최근 世界의 경제는 산업혁명후 최대의 급변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을 분석해 보면 世界의 경제는 국경이 없어지며 관세의 장벽도 낮아지는 이른바 세계의 경제와 국민의 경제가 통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수출입 自由化와 市場 개방시대에 自國産業의 보호를 위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自國 생산물의 가격을 세계 水準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의 개발로서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美国은 우리나라를 通商 불공정 상대국으로 지정하고 쇠고기 등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퍼스날 컴퓨터 등)의 시장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차보복(Cross Sectoral Approach)을 단행, 한국의 주력 상품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對韓 GSP(특혜관세)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을 NICS(신흥공업국)에서 떼어내 RICS(급속히 공업화 하는 나라)로 부르는 반면, 아시아의 무서운 호랑이(한국·대만·싱가폴·홍콩) 중에서 다시 한국과 대만을 두 마리의 “龍”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을 “第2의 日本”으로 보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經濟政策은 국경이 없는 경제전쟁에서의 自國産業 保護를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産物의 생산과 판매 가격을 낮추는 政策을 펴므로써, 경쟁력이 없는 산업과 개별 생산자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생산활동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다.

“

우리는 「輸出이 可能한 품목은 개방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原理를 먼저 이해하고 環境의 변화에 적응력을 길러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세계 경제의 압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

양돈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環境의 변화에 적응력을 길러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세계 경제의 압력에서 生存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輸出이 可能한 품목은 개방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原理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양돈산업도 국내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규제 등 시책에만 몰두하게 되면 국제경쟁력의 상실은 물론, 개별농장경영의 효율성이 뒤떨어져 오히려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을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좀더 긴 안목의 장단기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양돈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생을 돼지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양돈인이며 곧 양돈산업의 主人이자 양돈산업 발전의 主体인 것이다.

따라서 양돈산업 발전의 主体인 생산자는 그들의 조직을 통하여 스스로의 이익과 권리보호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기술 및 경제 環境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효율증가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업계와 학계는 물론 정부·국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양돈산업을 위한 정책은 國民經濟와 産業的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산업발전 정책은 산업주체의 발전대책을 지원하는 도구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돈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정에는 반드시 양돈산업의 主体가 참여토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제반법규를 수시로 개

“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대만이나 덴마크, 캐나다의 돈
육수출 지원정책에 상응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결국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보호
하는 길이며, 농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

정하여 순리적인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세계통합경제의
시장에 내세워야 된다.

양돈산업은 그동안 업계의 주도하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내외 주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성과 상품성의 提高를 위한 개별농장의 경영개선 노력의 증대와 정
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가축의 개량사업도 정책적으로 지원·육성되어
야 한다.

둘째, 생산원자재의 조세 및 가격정책이 경쟁 대상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
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원자재에 대한 높은 관세와 부가세
감면은 최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보다 우선되어 농촌 경제의 근
본적인 問題를 풀어 나가야 한다.

셋째, 전근대적이며 비위생적인 도축, 가공처리, 판매제도 등 유통문제를 개선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자들이 수탈당하듯 많은 것을 부당하게 잃어버리는 유통문제의 해결이 선
결문제이자 정부당국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인 것이다.

네째, 국내 축산물의 검역제도를 국제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축처리 시설의 개선이 전제조건이 되겠지만 전국 어느 곳에서
도축을 하든, 정부의 어느 기관 담당 공무원(수의사)이 검역을 하든 검역을 필한
축산물의 국내 유통과 국외 수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금융의 지원과 수출에 대한 稅制 뒷받침은 못할지라도 돈육
의 수출이 수출금융 및 稅制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되겠는가?

우리의 경쟁 상대국 대만이나 덴마크, 캐나다의 돈육 수출 지원정책에 상응하
는 정책적 뒷받침이 결국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보호
하는 길이며, 농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한다.*